데스크시각

'정치인'과 '정치꾼', 그리고 문화판

김미은
문화부장·편집 부국장

38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자금이 발견된다. 오랫동안 집권당의 뒷돈 역할을 했던 자금이다. 기자들이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지금도 한 기업체의 돈이 여당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여당은 비자금을 '개인 비리'로 무마시키려 하고, 주인공인 기자는 정권 중심으로 파고들며 '진실'을 쓰려 한다. 최근 흥미롭게 본 일본 드라마 '톱리그' 이야기다.

'톱리그'는 정치부 기자 중 일부를 말한다. 총리나 관방대신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정례 브리핑이 아닌 사석에서 '호출'을 받고 만나,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이너 서클'이다. '지금까지와는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자리'인 '톱리그'에 진입하며 주인공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난다. 드라마엔 살인 등 심장이 '쫄아드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자의 역할이나 지면 제작 등과 관련해 뜨끔해지는 장면도 많다. 배경은 일본이지만 우리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드라마엔 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정치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치인이다." 곱씹어 보게 되는 말이다. 정치꾼은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지고 '표'를 의식해 말을 바꾼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정두언 의원은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다. "권력을 잡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누려 보겠다. 한번 바꿔 보겠다." 정확한 말인 것 같다. 문제는 바꾸겠다는 '방향성'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다.

광주시장의 문화 마인드는?

요즘 빈번하게 받는 문자가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닐 터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의 출판기념회나 현직 의원들의 '성과'를 알리는 문자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싶으면서도 '지역 발전과 지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 말하는 그들의 각오와 업적이라는 것에 딴지를 걸고 싶어진다.

총선 출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다. 역시 선거를 통해 수장이 된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 운동 기간엔 갖가지 공약을 내놓고, 임기가 시작되면 그럴듯한 '청사진'을 펼쳐 보이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임기 1년 반을 넘긴 광주시장은 어떨까. 적어도 '문화'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한번 묻고 싶어진다. 광주시장은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장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

문화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문화경제부시장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첫 부시장을 임명한 후 1년 3개월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린 문화경제부시장이 대표적이다. 물론 지금도 직책은 살아 있지만 문화와 동떨어진 인물을 앉혔기 때문이다. 항의하는 문화단체들의 성명에는 문화경제부시장의 책무를 '중앙 정부와의 관계, 예산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규정했다. 문화에 대한 '철학' 부재와 함께 '경제'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폴리 전면 재검토'와 관련된 언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속 사업을 '관성적'으로 이어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민주적인 논의·평가 과정 없이 전 직원이 듣는 간부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 실무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효과적인 개편안을 찾으려 했다면 이 방법은 옳지 않다.

문화계에선 시장이 문화예술 중 유독 '국악'에만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70석 공연장에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10개월간 130회 공연한 국악 상설공연 예산이 14억 원이다. 시장 '관심 사항'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레 주 1회에서 5회로 늘리고 '올인'하는 게 맞나 싶다. 특정 장르 '쏠림'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시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박광태 전 시장 사례처럼 전 분야에서 실망감을 안긴 경우가 많았다. '소문으로 들려오던' 인물이 그대로 자리에 앉으면서 허탈감을 안기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몇몇 시립 예술단체장 자리도 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누군가 시장에게 줄을 대려 한다면 시장은 '그 사람'부터 가차 없이 쳐내야 할 일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문화계 수장들도 마찬가지다. '차기'를 노리다 보면 자꾸 '눈앞'만 보게 되고, 소신 있는 운영은 어려워진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좋은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에 '나쁜 사람'은 별로 없다. 난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부터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문화기관 수장이든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그 자리에 앉길 바란다. 다음 선거(임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좋아요 뽕'

이병우
단국대학교 교양대학 외래교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뽕은 '좋아요 뽕'이라고 한다. 이것에 한번 중독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좋아요 뽕'은 온 오프라인의 경계도 없다.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에 물들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계속 뽕만 찾게 된다. 추종자에 둘러싸여 한마디 한마디에 '좋아요'를 연호하니 그 얼마나 강력한 중독이겠는가.

'좋아요'는 권력이다. 그것이 쌓이고 댓글이 많아지면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다. 페이스북 마케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아요, 댓글, 공유' 삼총사이다. 때문에 '좋아요'를 올리기 위해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이 숫자를 올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사도 많다. 개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 활동은 거의 품앗이 활동이다. 찾아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야 자신의 글에서도 '좋아요'가 달린다.

인터넷 신조어 중에 '카페인 우울증'이 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를 딴 신조어이다.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껴 우울해지는 증상이라고 한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데 자신의 적은 숫자를 보면 자신의 삶이 초라해보인다고 한다.

SNS 이용과 우울증이 관련성이 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이 최근 19~32세 성인 대상으로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SNS 이용 시간과 계정에 들어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이용자가 하위 25% 이용자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최소 1.7배에서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타인의 게시물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이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페이스북 이용 후 느끼는 감정에 대해 '즐겁다'(28.8%), '만족한다'(9.5%)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화가 난다'(9.2%), '좌절감을 느낀다'(8.9%), '슬프다'(2.6%)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지인들의 해외 여행 사진을 보고 기쁜 감정보다는 부러움을 느끼는 반응이 있었다. 온라인 안에서 누가 더 행복한지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SNS에 대한 피로감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좋아요'를 감추는 실험을 하고 있다. 숫자를 감춘 대신 일부 계정의 사진 및 동영상에는 'OOO님 외 여러 명'이 표시된다. 정확한 수치는 계정 소유자만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숫자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평가 잣대로 여겨지면서, 게시물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SNS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멀리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잘 다뤄야 한다. '좋아요 뽕'과 우울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영 구루로 선정되기도 했던 에스더 다이슨의 말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은 술과 비슷하다. 당신의 행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외톨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더욱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남들과 교류하고 싶다면 훨씬 쉽게 교류할 수 있다."

기 고

광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공동 전형' 확대를

나인한
광사모(광주사립학교 교사 모임) 대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현재 광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다. 구체적으로 광주 시내 70개 사립 중·고등학교 중 기간제 교사가 30%가 넘는 학교가 28개에 이르고 있다. 그 중 6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40%를 넘고 있다.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 과정과 재량 활동 운영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현재 광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다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민주 시민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불평등한 차별의 구조에 놓여 있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평등 교육을 가르치거나 민주 시민 형성에 필요한 비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 있다.

둘째, 교육 과정 운영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 불안정 고용에 따른 신분적 불안과 과다한 업무를 안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생활 지도에서도 책임성을 기하기 어렵다. 정규직이 아닌 1년짜리 비정규직 선장이 키를 잡은 세월호는 침몰했고 작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립고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성관계와 성적 조작 사건이 그 사례이다.

셋째, 폐쇄적 의사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의 과정을 거치기에 신분은 매우 불안하고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잘못된 현실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과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 사학법인과 기간제 교사들의 '침묵의 카르텔'에 있다고 본다. 먼저 상당수 광주 사학법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광주교육청은 1차 시험과 그에 따른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2·3차 평가는 전적으로 학교 법인에서 주관하게 하여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학 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학교 법인과 관계된 현직 기간제 교사가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또는 채용 비리의 검은 유혹을 아직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도 침묵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1차 평가에서 공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과는 다른 내용 즉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하는 내용을 평가함으로서 현직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학의 기간제 교사들이 나서서 광주교육청의 공동 전형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 기이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도 현재 사학 법인과의 인연으로 채용된 상당 수 기간제 교사들이 광주교육청이 실시하는 1차 전형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차라리 기간제 교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학교 법인과 가까운 기간제 교사는 거의 무기 계약직과 같은 형태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학법인과 기간제 교사들의 침묵은 정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수많은 우수 교사들의 기회와 자원을 사장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학의 기간제 교사 과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많은 사학의 중앙 현관에는 '후진 양성'이라는 설립자 정신이 쓰여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광주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동 전형' 참여가 그 방안이다. 아울러 광주교육청은 전형에 응하는 모든 사학 법인의 소속 학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2020년 광주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동 전형'에 광주 시내 16개 사학법인이 참여하여 70여 명의 정규 교사를 채용한다는 희망의 뉴스가 나왔다. 앞으로도 광주의 모든 사학이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동 전형'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무너진 광주 사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社 說

광주의 긍지 U대회 레거시 사업에도 관심을

지난 2015년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는 국내에서 치러진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고쳐 쓰고 빌려 쓰는' 철저한 예산 절약으로 412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다. 경기에서도 한국은 대회 사상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시민들은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국제행사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한데 U대회가 끝난 지 4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성공 개최의 유산을 계승해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레거시(Legacy) 사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한때 광주유니버시아드재단 설립 등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수익금 정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올 여름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은 5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성대하게 추진되고 있다. 49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과 전국 규모 수영대회 창설(10억 원) 및 선수 육성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U대회 기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광주시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U대회가 전임 시장 시절 개최된 행사여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소송 때문에 수익금이 얼마나 남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확정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가 소송 장기화를 이유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U대회 경험이 광주의 긍지이자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출산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 환자 지원 늘려야

최근 광주 지역 난임 환자들이 무려 50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광주 지역 난임 환자는 4810명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3만3576명, 경기 1만8946명 대구 8155명, 부산 741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다고 한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긴 하지만 시술에 약값이나 검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을 정책 화두로 삼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작 소극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난임 부부들의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공수정엔 1회당 50만~100만 원이 들며,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150만~3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각종 검사와 약값 등을 포함해 몇 차례의 시술에 나설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17회 기준 1회당 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회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도 정해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과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광주시는 지난해 난임 부부 지원 예산이 남아 국고에 반납까지 했다.

결국 참다못한 난임 환자들이 최근 광주시 민원 코너에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난임은 부부관계 등 육체적 고통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이합집산

내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한창이다. 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합집산'은 한국 정치의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의 실익을 좇아 노선과 계파에 따라 흩어지고 다시 뭉치기를 반복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변형주의(Trasformismo)라하여 정당의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으로 해석하곤 한다. 하지만 정치적 신조에 관계없이 이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빗댄 말일 뿐이다.

변형주의는 자유주의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적 거래와 타협의 관행을 일컫는 말로 일반화됐다. 1850년대 이탈리아 정부의 집권 엘리트들이 의회 내에서 취약한 소수파의 지위를 벗어나 안정적인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공작정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주의 관행은 오랫동안 이탈리아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됐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호남에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선거가 끝난 뒤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발길을 돌렸고,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결국 분당의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안신당을 창당했다. 바른미래당도 극심한 내홍 속에 사실상 분당이 이뤄지고 있다. 당권파(손학규계)와 유승민계 및 안철수계로 나뉘더니 결국은 비당권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변화와 혁신'(가칭)이라는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 그대로 '3파(派) 3(色)'의 정치적 이합집산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철학과 소신 등이 다르다면 언제든 제각각 흩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을 꾀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보아 주기 어렵다. 국내 정치권의 '선거용 이합집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지닌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